다산포럼

김태희

상 주기, 정말 어렵네!

제 2회째 '다산목민대상' 시상을 준비하고 있다. 재작년에 처음 상을 제정하여 홍보를 시작했을 때, 다산연구소 이메일 독자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다.

"다산연구소에서 참 힘든 일을 하십니다. 제 경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슨 상을 주기에는 시기상조인 듯합니다. 아직 지방자치행정 현실이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자칫 다산선생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산연구소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참으로 걱정됩니다"

고마운 충고였다. 그러나 100% 무흠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하자는 격려의 의미도 있는 건데,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지 않은가.

'한비자'에 이런 얘기가 있다.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의 '자한(子罕)'이라는 자가 군주에게 말했다. "상 받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니 군주께서 맡으십시오. 벌 받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니 제가 맡겠습니다." 그럴 듯하게 여긴 송나라의 군주는 형벌권을 그 신하에게 맡겼다가 낭패를 당하고 만다. 요지는 상과 벌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지만, 이 이야기에서 벌은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즐겁지 못한 것인 반면, 상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가 기분 좋은 것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상은 즐거운 것일 뿐 아니라 효과적인 것이다.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주는 '다산학술상'이 있다. 다산학 및 관련 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학자(또는 단체)에 수여하는데, 최근 10회째 학술대상은 '연세대 국학연구원'이 수상했다. 그간 훌륭한 학자들에게 수여하여 학계에서 제법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학자로서의 다산정신을 현양하고 다산 연구도 진작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산의 목민정신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자치단체장을 잘 골라 상을 주는 것만큼 다산의 목민정신을 현양하는 게 또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재작년에 다산연구소도 한 신문사와 협력하고 농협의 지원을 얻어 다산목민상을 제정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내실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도 다산의 목민정신을 현양하는 것일 것이다.

당초 기획에는 단체'장'을 대상으로 시상하려 했다. 그런데 오늘날 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주민의 평가를 받는지라 달리 상을 주어 평가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은 면이 있었다. 결국 시상대상을 '단체'로 하되, 광역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로 하기로 했다.

제1회 다산목민상 후보를 찾는다는 홍보가 처음 나가자, 같은 내용의 문의전화가 줄을 이었다. 참가비나 홍보비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땐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부상으로 상금도 주는데, 참가비는 무슨?

나중에 알고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상들을 받고 있었고 그 가운데 돈 주고 받는 상이 있었다. 바로 현대판 선정비요 송덕비인가? 가렴주구에 여념이 없는 탐관오리가 백성의 고혈을 더욱 쥐어짜 자신의 선정을 기리는 비를 세운 가증스러운 역사가 오늘날도 엄연히 벌어지고 있었다니. 좀 따지고 들어가면 변명의 여지도 없지 않았다. 느닷없이 상을 주고 나서 돈을 뜯어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제1회와 제2회의 실사에 참여한 바가 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아홉 곳에 대해서 조용히 현장에 찾아가 살피는 일이다. 서류심사가 자신들이 제출한 공적사항에 의거하였으므로, 실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립적이거나 비판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포장의 마술이 드러나기도 하고 공적사항으로 내세운 것이 실은 문제덩어리임을 알게 되기도 한다.

만난 사람 가운데 혹자는 말한다. "다른 상은 몰라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름이 들어간 상을 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실사를 마치고 나면, 과연 다산의 이름을 붙인 상을 받을 만한 데가 있나 난감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제1회 때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이지 못해 '대상'을 주지 못하고 대신 그 다음 상인 '본상'을 네 곳 시상했다. 제2회는 심사위원회에서 실사보고서, 시민단체의 견조사서, 행안부 자료를 종합검토한 후, 대상 한 곳과 본상 두 곳의 어려운 결정을 마친 상태이다.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표창에 필요한 절차와 시상식만 남아 있다.

100점인 데가 어디 있겠나?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잘한 점을 장려하여 상을 주는 것이고, 그래도 다른 곳보다 나은 점에서 상을 주는 것이지. 나는 이번에 상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기대해본다. 다산목민상의 명예를 높여주기를, 그래서 상의 권위도 높아지기를.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 슬그머니 드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상 받은 단체가 불미스런 일로 거명되는 일은 제발 없어야 할 텐데.' 〈다산연구소 기획실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광주 U대회' 성공위해 시민역량 결집해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를 전담할 조직위원회가 오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조직위원회는 인프라 조성과 각종 행사계획 수립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각 분야의 준비사항들을 담당하게 된다.

조직위에는 여야 정치인과 함께 기업인과 체육인 등 중앙과 지역의 대표급 인사 200여 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광태 광주시장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경남 창원 출신인 정의화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조직위원장에 내정돼 지역과 정파를 아우르는 인적 구성도 눈길을 끌고 있다.

2015 U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원국인 170개국 1만5천여 명의 선수·임원, 5천여 명의 심판·운영진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 같은 해 광주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해 FISU 집행위원을 뽑는 집행위원회 선거와 전 세계 대학 총·학장 회의가 열린다.

광주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과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학 총·학장 등 2만 명이 넘는 석학들이 모이는 자체만으로 광주의 국제위상은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빈틈없는 준비로 완벽한 대회가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 국제 대회 개최에 필요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등 지금부터 치밀한 준비작업에 나서야 한다.

광주 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경기장, 도로, 항공, 숙박 등 하드웨어 부문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인프라 확충 못지 않게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선진화된 시민 의식 고취와 함께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도 요구된다.

2015 광주 U대회의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됐다.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지역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F1에 찬물 끼얹는 인천시 경주장 계획

인천시가 영종도에 국제 규모의 자동차 경기장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는 최근 국제 규격의 자동차 경기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논의 중이다. 시는 당초 이 곳에 경마장을 유치하려 했으나 경마장이 경북 영천으로 결정되자 4년 전 검토했던 자동차 경주대회 유치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경기장 부지가 인천공항과 가까워 해외관광객 유치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 대규모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가 경기장 건립 계획을 구체화할 경우 당장 오는 10월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는 F1대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메인트랙 5km의 국제 공인 자동차경주장과 레이싱스쿨, 대규모 쇼핑몰 건립 등 자동차 스포츠 메카 육성계획이 전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F1경주장 배후단지 조성 사업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전남도를 의식해 영암 F1경기장과는 달리 F1대회보다는 규모가 작은 A1이나 F3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F1대회가 1년에 3일 밖에 열리지 않는 점을 감안해 나머지 기간에 F3대회나 국내 자동차 경주대회 등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양지역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게다가 자동차 경주 동호인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지역에 국제 규모의 경기장이 세워질 경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영암F1경기장을 누가 찾겠는가.

앞으로 9개월 후면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F1대회를 두고 이제 와서 인천시가 '자동차 경주장 계획' 운운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정부가 이마저 방치한다면 지방은 고사(枯死)하라는 얘기다.

기고

서인덕

지방선거 투표율 올리는게 관건

올해는 8개의 선거를 한꺼번에 치른다.

최근 우리나라 투표율을 보면 지난 17대 대선 63.0%, 18대 국선 46.1%, 제4회 지방선거 51.6% 등 아주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10% 내외 범위에서 지속 하락하고 있다. 전남도 내만 놓고 볼 때 지난 17대 대선 64.7%, 제18대 국선 50.0%, 4회 지방선거 때 64.3%로 전국 투표율을 조금 웃돈 투표율을 보였지만, 여전히 낮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처럼 낮은 선거참여도를 가지고 지방자치와 민주정치 발전, 성숙한 선거문화 등을 운운하기가 다소 부끄럽다.

투표율 제고는 단순히 투표율 높이기를 위한 전략만 가지고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의 관심을 어떻게 불러일으켜야 하는 지가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누구의 정책이 좋다.", "어느 정책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식의 대화가 오고 가야 한다. 즉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해 관심을 깊이 가지면서 정책선택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 수준까지 오려면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잘 비교해서 언론을 통해 유권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적의 지렛대가 바로 일명 참 공약 선택하기인 '매니페스토(Manifesto)' 인 것이다. 매니페스토는 이미 2006년 지방선거에 도입돼서 선진 선거문화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제17대 대선과 제18대 총선에서 확대·적용되면서 일상생활 속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선거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도구인 매니페스토를 확대·적용해야한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병을 치료함에 있어 처방방법 면에서 단기적인 처방인 양약과 장기적인 처방인 한약으로 말들을 하는데,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장·단기 처방을 고르게 구사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투표참여 캠페인, 투표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은 단기적인 처방이고, 이에 반해 선거문화를 좋게 만들어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처방이 된다.

좋은 선거를 만드는 장기적인 처방은 바로 매니페스토인 것이다. 결국,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선택받는 정책선거가 되면 후보자는 상호 비방하지 않을 것이고, 돈으로 표를 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유권자는 돈 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면서 유권자는 선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것이고, 선거에 관심을 높일 것이다. 종국적으로 선거문화가 질적으로 깨끗하고 공정하게 돼 지방자치와 지방발전, 더 나아가 민주정치와 국가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2010지방선거의 성공 여부는 투표율 성장에 달려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통한 풍성한 선거를 기대해 본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기고

범기철

제설작업과 100만원

얼마 전 눈이 조금 내리던 날은 동적골 등산로 입구에 관공서에서 나온듯한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그런데 며칠 사이 눈이 많이 내리니 속수무책인 것처럼 시내는 제설작업 차를 볼 수 없었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 제설작업의 흔적은 없었다.

전국의 한 지자체에서 제설작업 총력전을 했지만 눈은 제거 안하고 염화칼슘만 뿌려 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눈 치우는 제설차량 한 대도 없어 제설 작업에 한계를 보였다고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세태를 반영해주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며칠째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눈을 치우고 있지만 제설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원래 눈이 별로 오지 않는 지역이라 도로 위 눈을 제거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온실 가스에 따른 기후 변화가 심해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비상상황에 대비하지 못했는지 아쉽다"며 "말로만 기후 변화에 대비한다고 하지 말고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다양한 각종 재해나 재난에 대한 비상대응책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우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큰 발전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자연재해에 의한 비상상황에 아직도 속수무책인 현실이 안타깝다. 눈이 많이 내린 것은 천재이지만 그 천재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은 정치의 힘, 행정의 역할이다. 그 다음 시민들 역시 그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내년부터 자기 집이나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은 눈 치우기는 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성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정당국이 제설작업에 늑장을 부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중요한 다리의 제설작업 소홀로 5중 사고가 일어나는 창피한 작태를 보이면서 법 제정으로 강제성을 주겠다는 것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발상이다.

그보다는 시민들의 민도를 높이고 전국 지자체 및 관계행정당국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의식을 계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국제행사를 눈 앞에 두고 광주의 세계화를 위하는 현 시점에서 시민의식 개혁은 중요하다.

자기 집 앞 눈도 치우지 않는 시민이 어떻게 선진 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자기 집 앞 제설작업에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소방청의 발상은 지금의 대한국인들의 민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민도와 지력 높은 국민들에게 그러한 법 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책임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벌과금만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을 필자는 심심한 유감으로 생각한다.

〈세계태권무아카데미 원장〉

無等鼓

겨울 김

요즘 김이 제철이다. 특히 그 맛을 으뜸으로 친다는 전남 김은 겨울에 맛과 영양이 절정을 이룬다.

가공된 마른 김 100g당 단백질이 30~40g이나 들어 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로 통하는 콩에 뒤지지않는다.

김엔 면역력을 높여 주고 눈 건강을 돕는 비타민A가 풍부하다. 김 한 장의 비타민A 함량은 계란 두 개와 맞먹는다.

유해산소를 없애 노화·암을 예방하는 비타민C도 많다. 100g당 함량이 93㎎으로 내로라하는 과일·채소가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다.

김은 칼슘·철분·칼륨 등 미네랄의 보고이기도 하다. 특히 칼슘 함량(100g당 325㎎)은 '칼슘의 왕'으로 통하는 우유의 세 배 이상이다.

또 비타민U라는 항(抗)궤양성 물질이 풍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타민U라고 하면 흔히 양배추를 떠올리나 김의 비타민U 함량은 양배추의 70배에 달한다.

좋은 김은 빛깔이 검고 광택이 난다. 향기가 좋으면서 불에 구우면 청록색으로 변하는 것이 상품이다. 구우면 김에 든 붉은 색소가 청색 물질(피코시안)로 바뀐다. 그러나 김이 물에 젖거나 햇빛에 노출되면 붉은 색소와 청록색으로 변하지 않고 향기도 없어진다. 따라서 마른 김은 습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옛말에 "김 고장에 딸 시집 보낸 심정"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김 양식은 중노동이다. 지금은 대부분 기계화됐지만 김 양식 어민들의 수고는 아직도 상상을 초월한다.

필자가 아는 한 변호사는 어릴 적 학교 가기 전 집 일로 김을 발에 붙이는 게 죽을 만큼 싫었다고 한다. 그래서 고향 섬을 벗어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게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동인이 됐다고 한다.

오늘 밥상에 올려질 맛있고 영양가 많은 김에는 어민들의 진한 수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잠시나마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는지…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

'경운기 저속 추월 의무화' 면허 실기시험에 넣었으면

농촌의 경운기나 트랙터, 관리기 같은 농기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농민이 죽는 확률이 무려 승용차의 7배나 되고, 요 근래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가 251명이나 된다니 경악할 일이다.

그 이유는 말할 필요조차 없이 농기계가 농사일 위주로만 만들어져 있을 뿐, 그걸 운행하는 농민 즉 운전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물론 농기계의 안전장치를 추가하려면 그만큼 기계값이 더 비싸질 수 있고 농민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차량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시험에 농기계가 앞에 있을 때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려서 농민에게 주의를 주며 저속으로 추월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시켜 그것을 운전면허 실기시험에 추가시키는 방법도 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민들의 안타까운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이 방법을 꼭 추진해 봤으면 한다. ▲송희수·나주시 송촌동

시간 개념없고 불친절한 일부 소형 택배회사 '불쾌'

최근에 규모가 적은 택배회사에 위탁해 택배를 하려 했다.

오후 3시와 4시 사이에 집에 와서 물품을 가져 가겠다고 해놓고선 4시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아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짐이 많이 밀려 좀 늦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놓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내짐을 수수료를 주고 택배를 하는데 내가 직접 들고 경비실에 맡겨야 하고 도착도 이틀 후에나 한다니 중대형 택배회사들에 비하면 배짱이 아닌가. 또한, 택배로 보내온 물품도 때로는 전화연락도 해보지 않고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고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업인 택배업체들이 고객에 대한 편의와 배려는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편의만 챙기는 것인가. 나중에 고객이 다 떨어져 보아야 정신 차릴지는 몰라도 이런 불편함과 불친절한 택배업체는 각성해야 한다.

▲박옥희·광주시 북구 우산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